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모색

발표자 : 구회근¹⁾, 오세용²⁾

[목차]

- I. 워크아웃(Workout)의 의의
- II. 기촉법의 제정경위 및 변천
- III. 기촉법의 주요 내용 - 회생절차와의 비교
- IV.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와의 연계 주요 사례
- V. 기촉법 상시화 주장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VI. 회생절차 개선방안

I. 워크아웃(Workout)의 의의

1. 워크아웃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이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사적정리방식의 채무재조정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³⁾ 이처럼 워크아웃은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절차로 알려져 있으나, 채권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채권자’ 주도로 채무재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실상은 정부(금융당국) 주도형의 기업개선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이전까지는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도를 막아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부르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대부분 정부의 용인 내지 종용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초 한보그룹, 삼미그룹 등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정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추가융자 여부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기업 간의 문제라는 태도를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조규홍,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실무”, BFL 제53호(2012.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2면.

취하였다. 이에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의 추가융자를 거절하고 채권 추심에 나섰고, 한보그룹, 삼미그룹 등은 모두 부도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가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사정리절차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과거의 산업합리화조치⁴⁾나 구제금융을 계속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융자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결국 1997년도 위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 등을 받아들여 정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워크아웃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듯 워크아웃은 정부의 경제운영방식, 채권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법정도산절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⁵⁾ 첫째, 정부나 금융감독기관은 워크아웃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시행과정을 보면 정부가 주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워크아웃이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을 근거로 하므로 워크아웃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금융기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워크아웃과 금융기관지배구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또는 감독기관으로서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의사결정이 금융기관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식의 하나이므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생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워크아웃제도가 없다면 기업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2. 워크아웃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에서 ‘기촉법’이라고 함), 5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일명 채권은행협약), 건설회사 및 시행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일명 대주단협약), P/F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P/F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일명 P/F대주단협약), 신용위험평가 B등급의 중소기업

4) 1960년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육성목표로 선정된 기업이 부실해지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기업의 채무조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기업의 통폐합, 제3자 인수, 채무의 면제나 유예, 자금지원, 세제상 혜택부여 등 각종 지원책과 강제조치를 그 수단으로 하였다.

5)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4권 4호(49호, 2006. 2.), 118~119면.

에 대하여 적용되는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 그 외 채권단자율협약 등 다양한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있다.⁶⁾

가. 기촉법

기촉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대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에 사용되었던 구 기업구조조정협약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촉법은 4번에 걸쳐 한시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제1차 기촉법은 2001. 9. 15.부터 2005. 12. 31.까지 시행되었고, 제2차 기촉법은 2007. 11. 4.부터 2010. 12. 31.까지 시행되었으며, 제3차 기촉법은 2011. 5. 19.부터 2013. 12. 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 1. 1. 제정되어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기촉법 제2조 제4호).

나.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일명 채권은행협약)

채권은행협약은 기촉법 비적용기업인 채권액 500억 원 미만에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제도라고 불린다. 금융감독원이 2004년 5월경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여신구조에 맞는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기존의 채권은행협약(2001년 6월 최초 체결)을 전면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가기관으로는 은행권(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캠프, 수출보험공사 등 총 23개 기관이 있다. 증권사, 저축은행, 신탁 등 제2금융권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촉법 비적용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업이므로 제2금융권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여신거래규모가 미미하여 위와 같은 참가금융기관만으로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다.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

주로 KIKO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의 이사회 결의로 2008년

6) 조규홍,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실무”, BFL 제53호(2012.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5~46면.

10월부터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 은행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 및 KIKO손실이 있는 대기업이고,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신용위험평가가 A등급인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 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IKO 등 손실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는데,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앞서 본 채권은행협약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라. 대주단협의회운영협약(일명 대주단협약)

대주단협약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 협약에는 은행권, 제2금융권,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8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채권 금융기관이 보기에 일시적으로 유동성부족을 겪고 있으나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기업 및 관련 시행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회사채등급 BBB- 등급 이하인 기업은 제외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지원은 크게 기한연장, 신규자금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기한연장은 주채권 금융기관의 판단으로 협의회 의결 없이 채권행사 유예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채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이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규자금 지원에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 의결 없이 지원 가능하다.

마.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일명 P/F대주단협약)

P/F대주단협약은 P/F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상화 및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은행권, 수출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80여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당해 P/F사업의 사업구조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P/F대주단협

의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시행사가 P/F주간사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찬성을 통해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지원 등을 의결하게 된다.

바. 채권단자율협약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절차의 적용은 필요하나 기촉법 등의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기촉법 등의 적용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경우, ② 기촉법 적용시 선박건조계약의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③ 기촉법이 부재한 경우 등이 있다.

① 기촉법 등의 적용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경우의 예로서는 LG카드⁷⁾, 금호석화⁸⁾ 등이 있었다. ② 기촉법 적용시 선박건조계약의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로서는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이 있었다.⁹⁾ ③ 기촉법이 부재한 경우의 예로서는 팬택(2006년)¹⁰⁾, 진흥기업(2011년)¹¹⁾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한 채무재조정의 주요 방식으로는 채무면제, 출자전환, 기존 채권의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자율협약 이행 중 기업구조조정방식을 둘러싸고 채권단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제시한 경영계획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강제성이 높은 워크아웃절차나 회생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자율협약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비해 기업신뢰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늘 채권단의 의견합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실효성 등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7) LG카드는 기촉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 8조 원 상당의 ABS를 조기상환하여야 해서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8) 금호석화는 기촉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신용도가 하락하고 해외법인 관련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9) 위 두 회사의 경우 선박건조계약의 내용 중에 기촉법을 적용하게 되면 건조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

10) 2005. 12. 31. 제1차 기촉법의 시한만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음. 당시 2006. 1. 1.부터 2007. 11. 3.까지 기촉법의 공백이 있었음.

11) 2010. 12. 31. 제2차 기촉법의 시한만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음. 당시 2011. 1. 1.부터 2011. 5. 18.까지 기촉법의 공백이 있었음.

3. 현행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 개관

위와 같은 워크아웃절차 중에서 이하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관해보려고 한다.

가. 대상기업의 선정

어느 기업이 기업신용위험평가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¹²⁾으로 분류되면,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 및 워크아웃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기촉법 제4조 제1항).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기촉법 제4조 제2항).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워크아웃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기촉법 제4조 제3항).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워크아웃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워크아웃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기촉법 제4조 제4항 본문).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집 통보는 불필요하다(기촉법 제4조 제4항 단서).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기촉법 제6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12) 기촉법 제2조 제5호에서 부실징후기업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고하여야 한다(기촉법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이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기촉법 제19조 제2항).

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기촉법 제15조 제1항, 제2항). 1차 협의회는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데,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1차 협의회에서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기촉법 제6조 제2항). 또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촉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기촉법 제18조 제1항 단서).

주채권은행과 협의회는 향후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기촉법 제7조 제1항). 부실징후기업이 위와 같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기촉법 제7조 제2항). 하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기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실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기촉법 제4조 제5항).

라.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플랜) 마련·확정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플랜)이 작성된다.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과 사이에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촉법 제8조 제1항).

위와 같은 기업개선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기촉법 제8조 제2항).

-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기업의 경영목표수준
- 위와 같은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경우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위와 같은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¹³⁾ 또는 신규 신용공여¹⁴⁾(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기촉법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기촉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 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기촉법 제11조).

기업개선계획이 마련·확정되기 위하여는 향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채권금융기관과 당해 기업과의 협상 뿐 아니라 다른 채권금융기관

13)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촉법 제2조 제7호).

14) 신용공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촉법 제2조 제6호)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간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마.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기업개선약정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채권행사유예기간, 기존채권의 조정, 신규자금의 지원, 계열사간 보증채무해소, 기존사업 등의 조정 등이 있다.¹⁵⁾

채권행사유예기간(워크아웃기간)은 통상 3~5년 정도이고, 유예기간 중에는 대출금 상환이 없고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워크아웃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의 경우 1999년 8월경 워크아웃절차를 개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워크아웃기간 연장을 거친 후 2013년 3월경 비로소 워크아웃절차를 졸업하였다.

기존채권의 조정방법으로는 출자전환과 금리재조정이 있다. 적정차입금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관하여는 출자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담보채권 보유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이 이를 분담하게 된다. 대상 기업의 잔존차입금 규모, 장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금리를 재조정하게 되는데, 평균금리수준을 기업개선계획 내내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지 말고 매년 대상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평소 담보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던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금리재조정시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담보채권자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 기업을 청산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최소한 우대금리 이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 관련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워크아웃기간 동안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담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⁶⁾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자금을 지원하거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원자재구입자금(L/C), 할인어음 등 한도성 운영자금을 위주로 지원하게 된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구분 없이 채권액 비율로 채권자들이 분담하게 되는데, 법규상의 제한으로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신규자금지원후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하겠다는 확약서(손실분담확약)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하기도 한다. 한편, 신규자금을 CB(전환사채) 등으로 지원하여 리스크를

15) 조규홍, “Out of court workout and pre-package”,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79면.

16)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과 KDB -외환위기 이후 15년을 중심으로-, 127면.

부담한 채권자가 오히려 나중에 기업가치상승으로 인해 큰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신규자금지원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및 책임문제 등으로 신규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기촉법에서는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기촉법 제11조), 기업개선약정 체결시에도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상호 보증채무로 얽혀 있어 피보증계열사의 부실화에 의해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주채무에 비해 타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규모가 과다하여 보증채무 부담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서는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사간 합병에 의한 자연해소,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일괄면제, 현금변제 또는 대여금 탕감, 피보증회사 채권단의 출자전환, 보증채무의 주채무전환 등이 있다.¹⁷⁾

기존사업 등의 조정 내지 사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회사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비용절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각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사동의서, 주식감자 등 관련 주주총회위임장 등을 징구하기도 한다.

기촉법상 협의회가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최장 4개월)까지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고(제6조 제3항),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워크아웃절차 개시 후 늦어도 4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기업개선약정)을 확정·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¹⁸⁾ 위 기간 내에 매수청구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기촉법 제20조 제1항).

바. 워크아웃 계획 실행 및 사후관리

17)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과 KDB -외환위기 이후 15년을 중심으로-, 132면.

18) 신규자금지원의 내용에 반대하여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기촉법 제9조 제1항),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기촉법 제9조 제2항). 주채권은행은 위와 같은 점검결과를 기초로 해당 기업의 워크아웃 지속 여부 및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기촉법 제9조 제3항). 경영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현 상태로는 정상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 경영진을 퇴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도 한다.¹⁹⁾

그 외에도 실질적인 이사회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약정 체결시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권을 명시하고, 사외이사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손실부담이 크고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단을 회사에 파견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독려하고, 영업실적 및 자금수지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여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자율경영체제를 위하여 경영관리단을 철수하고 있다.

사. 워크아웃 졸업

워크아웃절차 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영업실적과 자구계획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를 워크아웃절차 졸업 내지 종료라고 부른다.

중전의 워크아웃 종결 사례로 대우조선해양, SK네트웍스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대우중공업에서 분할 된 후 3개월 간 매출 7,815억 원, 경상이익 765억 원을 달성하였고, 2001년 상반기에도 매출 1조 4,788억 원, 경상이익 1,532억 원을 실현하는 등 경영실적이 대폭 개선되었고 향

19) 경영평가결과가 미진하여 경영진이 교체된 사례로는 미주제강, 고합, 새한 등 사례가 있었다.

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주채권은행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였고,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기업개선작업 종료를 위한 분석을 거쳐 2001. 8. 23. 워크아웃절차가 종료되었다.

SK네트웍스는 워크아웃절차 진행 중이던 2003. 10. 27.경 총 채권액 6조 6,521억 원 중 2조 2,300억 원 상당을 상환우선주 9,765억 원을 포함하여 출자전환하였고, 그 후 연간 매출 15조 원, 당기순이익 약 5,000억 원을 실현하는 등 대표적인 우량회사로 변신하였다. 4년 연속 흑자 등 경영목표달성, 투자적격 신용등급(BBB-) 회복, 코스피 200지수 편입, 채권금융기관 보유 우선상환주의 상환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었고, 결국 2007. 4. 17.경 워크아웃절차를 졸업하였다.

II. 기촉법의 제정경위 및 변천

1. 제정경위

가. 외환위기 당시 화의제도 및 회사정리제도 상황²⁰⁾

구 화의법(1962. 1. 20. 제정, 2006. 4. 1. 폐지)에 의한 화의절차는 기존 경영자 및 기업주가 그대로 기업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집단적 협상을 통해 화의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화의절차는 199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용건수가 급증하자 1998. 2. 24. 대기업은 화의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화의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신설된 구 화의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다. 채무자들은 화의절차를 통해 기업지배권을 유지하고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주로 채무기한연장 또는 일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화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화의절차가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책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파산을 면하기에만 급급하여 수행이 불가능한 화의안이 인가되고 있다는 비판 등이 있었다.

당시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제정, 2006. 4. 1. 폐지)에 의하면, 기존

20)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법원 산하 도산법커뮤니티 원외세미나 발표문(미공간, 2011. 10.), 16~18면.

경영자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에 의해 경영권이 교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회사정리신청을 한 후 회사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되거나 정리계획이 불인가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를 이른바 ‘법정관리’라고 부르곤 했다. 회사정리신청을 하게 되면 경영권을 상실하고 파산까지 염두해 두어야 했기 때문에, 기업주로서는 회사정리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정리절차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부도위기에 처한 다수의 기업들은 회사정리절차보다는 경영권이 유지될 수 있는 화의절차를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8. 2. 24. 화의법 개정으로 대기업은 화의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도유예협약²¹⁾

위와 같이 외환위기로 연쇄도산의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두려워하면서 회사정리절차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목도한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부도처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8개 시중은행장²²⁾은 1997. 3. 24.경 정상적인 기업이 부도 소문 때문에 자금난에 빠져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기업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후 1997. 4. 18.경 35개 은행장들이 모여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²³⁾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위 협약을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이라고 한다. 형식상 금융기관들이 만든 협약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주도하였다.

위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 중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채권행사를 유예함으로써 부도를 일정기간 유예시키고 그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생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위 협약의 첫 적용대상으로 진로그룹이 선

21)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4권 4호(49호, 2006. 2.), 122~124면.

22) 조흥, 상업, 한일, 제일, 서울, 외환, 국민, 신한은행

23) 위 협약은 전체은행의 여신잔액이 2,50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에 적용되어 당시 51대 그룹까지가 그 적용대상이 되었다. 협약대상기업은 부도가 나더라도 당장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2개월간 유예됨으로써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면서 정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유예기간 동안 금융기관들은 대상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정확히 분석·파악해보자는 것이 위 제도의 목적이었다.

정되었고, 그 후 대농그룹, 기아그룹이 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97년 4월 이후 10월까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총 25개 업체였다. 하지만 삼안건설기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업체는 자력갱생에 실패하여 결국 화의절차 내지 회사정리절차²⁴⁾를 신청하였다. 게다가 구제금융을 실시한 IMF에서는 위 부도유예협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부도유예협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1997년 12월 이후 위 협약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다. 기업구조조정협약²⁵⁾

정부는 1997년 10월경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융자제도를 고안하였다. 당시 은행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협조융자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채권은행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집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제도화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협조융자의 대상은 여신 2,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고, 은행권 전체의 공동부실화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의 위험도 있었다. 협조융자의 방식으로 진로그룹에 50억 원이 제공된 것을 포함하여 1998년 4월경까지 총 15개 기업군에 총 3조 4,277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해당기업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여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대기업의 부실이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그 부실이 위와 같은 협조융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법원이 주재하는 도산절차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었던 경제관료들은 법원이 법정도산절차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도록 하기 보다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원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1998. 6. 25. 체결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이다. 기업구조조정협약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화한 것이다. 위 협약은 1998. 6. 25. 체결되어 2000. 12. 31.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²⁶⁾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주된 내용은 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는 즉

24)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대농, 대농중공업, 미도파 등

25)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4권 4호(49호, 2006. 2.), 124~126면.

26) 당초에는 1999. 12. 31.까지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기간 만료전인 1999. 11. 29.경 IMF와의 합의를 거쳐 2000. 12. 31.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다.

시 협약 가입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②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방식 등 채권단의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 ③ 채권금융기관 조정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설치, 조정신청 및 위약금 부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협약에는 210개 금융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종전의 부도 유예협약보다 참가기관의 대폭 증가하였다.

위 협약 마련 이후 1998. 7. 6. 고합계열 4개사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된 이래 2000년 6월경까지 총 104개사가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였고, 그 중 83개사에 대해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었다. 2001. 9. 15. 기촉법 시행 전까지 그 중 25개사는 매각,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정상화되었고, 40개사가 절차 진행 중이었다.²⁷⁾

위 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제도는 운용과정에서 자율적 이해조정의 시장관행 부족, 일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 문제, 부실기업 판정기준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채권금융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촉법이 제정되어 2001. 9. 15.부터 시행되기에 이른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한편, 기업구조조정협약이 만료된 때로부터 기촉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기간 동안에는 위 협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채권금융기관 간 협약으로 이름을 달리하여 체결되었고, 당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기업에 채권을 가지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참여하였다.

2. 기촉법의 변천과정

가. 제1차 기촉법(2001. 9. 15.부터 2005. 12. 31.까지)

제1차 기촉법은 위 법에 의한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시장관행으로 정착된 후에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05. 12. 31.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약정 등은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봄으로써 종전의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해 워크아웃절차를 진행 중이던 40개사에 대하여도 기촉법을 소급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제1차 기촉법 시행 이후 시한만료일인 2005년말까지 총 25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제1차 기촉법이 적

27)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과 KDB -외환위기 이후 15년을 중심으로-, 83면.

용된 65개사 중 경영정상화²⁸⁾, 매각²⁹⁾ 등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은 51개사로서 성공률은 78.4%였다. 반면, 삼보컴퓨터 등 7개사는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나. 제2차 기촉법(2007. 11. 4.부터 2010. 12. 31.까지)

제1차 기촉법이 2005년말 시한만료되자 재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제1차 기촉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약 형식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하여 2007. 3. 30.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위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기촉법 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결국 2007. 11. 4. 제2차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으로 폐지되었다.³⁰⁾

제1차 기촉법의 시한만료 이후 제2차 기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촉법 공백 시기에 추진된 주요 사건으로는 팬택 사건을 들 수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은 2006년 12월에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시기에는 제1차 기촉법이 시한만료되어 관련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고, 50%를 상회하는 비협약채권자(새마을금고 등)들을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웰컴 등의 로열티에 관하여 출자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1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는 등 실적이 양호해짐에 따라 2011년 12월 워크아웃절차를 종료하게 되었다.

2006년 들어 일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의부족과 이해대립 등으로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공조체제 구축과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재입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이에 2007년 4월 경 국회 재정위에서 제2차 기촉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제2차 기촉법은 2007. 8. 3. 공포되어 2007. 11. 4.부터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제1차 기촉법에서는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약정 등은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봄으로써 소급적용을 인정하였지만, 제2차 기촉법에서는 위와 같은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제1차 기촉법에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전에 추가 신규공여를 원칙

28) 하이닉스, 현대건설, 대우건설, SK네트웍스 등 20개사는 경영정상화 완료.

29) 현대석유화학, 쌍용 등 31개사는 매각 완료.

30) 하지만 실제로 위 협약에 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없었음.

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사적자치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제2차 기촉법에서는 약정 체결 전 신규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³¹⁾

다. 제3차 기촉법(2011. 5. 19.부터 2013. 12. 31.까지)

제2차 기촉법이 2010년말로 시한만료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법조계 등에서는 기촉법의 일부 조항들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당시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P/F대출 확대로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부실판정을 받고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위와 같은 제도개선 의견내용이 반영된 제3차 기촉법이 제정·시행되게 되었다.

제2차 기촉법의 시한만료 이후 제3차 기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촉법 공백 시기에 추진된 주요 워크아웃 사건으로는 진흥기업 사건을 들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건으로 엘아이지건설 사건을 들 수 있다. 진흥기업의 경우는 기촉법이 부재하였던 2011년 2월 워크아웃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자율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차 기촉법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종전의 기촉법이 해당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해당기업에 신청권을 부여하였다.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워크아웃절차를 개시하는 권한은 주채권은행에게만 있었고 채무자에게는 신청권한이 없었다. 제3차 기촉법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후 해당기업에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채무자 기업이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 진정한 신청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 종전의 기촉법과 달리 자금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협의회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자금관리인

31) 대상기업이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사결과를 보기 전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손실이 가중될 우려는 있으나,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면 기업가치가 급격히 훼손되어 기업정상화를 추진할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급운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음.

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워크아웃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제3차 기촉법에서는 자금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자금관리인 관련 사항은 자율적으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자금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관리인의 역할은 채권단이 지원한 자금이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금관리인을 통하여 채권단과 대상 기업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상 기업의 재무·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³²⁾

셋째,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반대매수청구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반대채권자의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제3차 기촉법에서는 협의회 결의에 찬성한 채권자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제20조 제1항). 또한 반대채권을 매수하는 시한도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경영정상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도록 변경하여 신속하게 반대채권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2항).

넷째, 종전 기촉법에는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제3차 기촉법에서는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섯째, 대상 기업에 대하여도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권한이 있으나, 대상 기업에는 위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 제3차 기촉법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이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계획 관련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였다(제23조 제3항).

라. 현행 기촉법(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32) 조규홍,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실무”, BFL 제53호(2012.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0면.

제3차 기촉법이 2013. 12. 31.로 시한만료됨에 따라 기촉법의 공백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 1. 1. 현행 기촉법이 제정되어 201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약정 체결, 채권재조정 등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보도록 함으로써(부칙 제4조), 법 시행 전부터 진행 중이던 워크아웃절차에 대하여도 현행 기촉법의 효력이 미치도록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기촉법에서는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8조의2).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경우 외에도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Ⅲ. 기촉법의 주요 내용 - 회생절차와의 비교

1. 기촉법과 통합도산법³³⁾과의 관계

현행 기촉법 제3조는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통합도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제3차 기촉법에서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다.

중전의 제1차 및 제2차 기촉법 규정에서 기촉법이 마치 통합도산법보다 우선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초래하였다. 정부에서도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이 회생절차 등 법정도산절차보다 우선한다기 보다는 법정도산절차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등 기촉법이 통합도산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3차 기촉법에서는 ()안에 통합도산법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변제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 전 기촉법하에서는 위 조항을 들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여지가 없어졌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적정리절차인 위

33) 이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합도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변제에 대하여도 부인권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⁴⁾ 위 대법원 판결은 제3차 기촉법이 적용되기 전 사건이었는데, 위 조항을 들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회생절차와의 비교

가. 대상기업

기촉법에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된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회생절차는 기업의 규모나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법인격체 및 개인을 규율한다. 단, 개인으로서 담보채무 10억 원 및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를 위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나. 신청권자

제1차 및 제2차 기촉법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워크아웃절차를 개시하는 권한은 주채권은행에게만 있었고 채무자에게는 신청권한이 없었다. 제3차 기촉법에서는 주채권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후 해당기업에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채무자 기업이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 진정한 신청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회생절차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 및 지분권자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평가

3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6024 판결.

은행들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통상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고, D등급을 받은 기업(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회사들이 회생절차를 주로 신청하게 된다.³⁵⁾ 위와 같은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기촉법 제4조 제5항).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기촉법 제7조 제1항). 법적으로 이러한 실사와 평가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실사와 평가가 채권재조정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서 기업의 재산가액의 평가,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상황,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통합도산법 제87조). 통합도산법에서는 조사위원의 선임을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다.³⁶⁾

라. 회사의 경영권 문제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기존 경영진이 바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기존 경영자가 계속하여 경영을 하게 된다. 다만 대상 기업과 개별적인 약정을 통해 자금관리인을 파견하여 회사의 자금집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한다.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약정 체결시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권을 명시하고, 사외이사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 회사정리법하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35)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14면.

3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회생컨설팅트가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고 있다.

서는 종전 경영진이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일명 DIP제도)를 도입하였다(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DIP제도 및 회생절차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으나, 워크아웃절차에서도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³⁷⁾ 법률에 관리인 선임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회생절차와 달리 워크아웃절차에서는 경영권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경영진 퇴진 등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도 의문이 있다.

마. 협의회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결의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후 유예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대상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단, 채권재조정에 관한 결의에는 일반적인 협의회 결의 요건에 더하여 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이행될 경우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193조 제3항). 다만, 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우선변제합의를 회생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무담보 회생채권자에게 우선하는 회생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약정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권리의 종류에 따른 조별 표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가결되고,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고,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통합도산법 제237조). 다만, 주주의 조의 경우는 자산의 총액이 부채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146조 제3항). 모든

37) 이지홍·문병순, “기업구조조정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 LG Business Insight(2013. 11. 13.), 17면에 의하면, 2006년 이후 구조조정기업의 대주주 변경비율은 회생절차에서 11.3%, 워크아웃절차에서 14.8%로서 큰 차이가 없다.

조에서 가결되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다. 워크아웃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일부 조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강제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244조).

바. 워크아웃절차의 중단 - 실패하는 경우

기촉법상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후 중단되는 경우로는 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기촉법 제4조 제5항), ②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기촉법 제6조 제3항), ③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점검결과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촉법 제12조 제1호), ④ 평가결과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촉법 제12조 제2호), ⑤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절차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기촉법 제12조 제3호) 등이 있다. 위 ⑤사유는 제3차 기촉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기업에게 워크아웃절차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응하여 절차의 중지권한 역시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종전 기촉법에는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제3차 기촉법에서는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회생절차에서 사전계획안이 제출되더라도 관리인은 별도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통합도산법 제223조 제5항), 이미 워크아웃절차에서 실패한 내용의 계획안을 회생절차에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다.³⁸⁾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로는 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통합도산법 제285조, 제286조 제2항), ②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통합도산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③ 가결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는 경우(통합도산법 제286조 제1

38)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21면.

항 제3호) 등이 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인가 후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28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사. 보증인에 대한 효력 문제

기촉법에는 통합도산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에서는 민법상의 보증채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기업개선약정에서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하면서 주식인수대금납입채무와 회사채 상환채무를 상계계약방식으로 소멸시켰다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소멸된다.³⁹⁾ 그래서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워크아웃절차 기간 중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유예하고 있다.

한편,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감면 등을 정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 등과 같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제250조 제2항 제1호).

아. 신규자금공여(DIP Financing)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자금을 지원하거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원자재구입자금(L/C), 할인어음 등 한도성 운영자금을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구분 없이 채권액 비율로 채권자들이 분담하게 되는데, 법규상의 제한으로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신규자금지원후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하겠다는 확약서(손실분담확약)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하기도 한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신규자금지원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및 책임문제 등으로 신규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기촉법에서는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기촉법 제11조), 기업개선약정 체결시에도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이행될 경우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39)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등

인정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193조 제3항).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사례로는, LG카드에 유동성 문제 해소 및 영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3.7조 원을, 팬택계열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쌍용건설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4,300억 원을, 진흥기업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100억 원을, 대선조선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4,110억 원을 각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이행될 경우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193조 제3항).

통합도산법에서는 2009년 개정을 통해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최우선 공익채권으로 취급함으로써(제180조 제7항), 이른바 DIP Financing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DIP Financing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⁴⁰⁾

IV.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와의 연계 주요 사례

1. 대우자동차판매 사건

가. 경위

대우자동차판매는 1999년 8월경 대우그룹의 12개사 워크아웃절차 개시와 함께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지속적인 흑자시현 등으로 2002년말 워크아웃절차를 졸업하였다. 그런데, 송도부지개발, 유니버샬스튜디오 설립 등 대형사업을 추진했던 건설부문이 건설경기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2010. 4. 8.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여 2010. 4. 14. 그 절차가 개시되었다. 2010. 4. 21. 신규자금 600억 원이 긴급 지원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6차에 걸친 협의회 개최결과 채무자 회사를 3개 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내용의

40)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는 2010. 10.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정책금융공사 등 투자자들은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여 채무자 회사에 1,200억 원을 투자하여 그 중 600억 원으로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600억 원으로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이후 대우로지스틱스는 위와 같이 조달된 자금 중 600억 원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의 조기변제에 450억 원을 영업용 선박구입에, 150억 원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다음 2011. 6.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사건은 투자펀드에 의한 DIP Financing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양테크, 새한비료 사건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영업용자산인 공장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장매각이여의치가 않자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저축은행·캐피탈사)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그 공장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였다.

계획을 수립하여 2010. 9. 10.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는 2011. 3.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인적분할방안에 대한 특별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고, 2011. 4. 25. 버스판매사업부문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6. 22. 건설사업부문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워크아웃 비협약채권자들 중 약 2,000억 원 가량을 보유하는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사업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 역시 실패하였으며,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황이 양호하지 못하여 이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워크아웃절차를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통한 회사분할, 채무감면 및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와 같은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검토

위 사건은 사업분할 및 투자유치가 포함된 기존의 워크아웃플랜을 반영하여 Fast Track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에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대우자동차판매의 주된 사업부문을 구성하고 있던 버스판매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은 독자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할과 동시에 신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영안모자그룹과 중국 풍화그룹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송도부지개발은 대형중심에서 소형중심으로 변경인가를 받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회생계획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는 버스판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대우자동차판매(신설법인), 건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대우산업개발(신설법인), 송도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대우송도개발(존속법인) 등으로 인적 분할이 진행되었다. 그 후 대우자동차판매⁴¹⁾는 영안모자그룹의 투자유치로 2012. 1. 1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대우산업개발은 중국 풍화그룹의 투자유치로 2011. 12.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쌍용건설 사건

41) 그 후 자일자동차판매로 회사명이 변경됨.

가. 경위

쌍용건설은 지속적인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및 실적악화 등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2012년 9월경 대주단자율협약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5개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신규자금 1,300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쌍용건설은 2013. 2. 26.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3. 3. 4. 워크아웃절차 개시를 결의하고, 2013. 3. 19. 1차 출자전환(1,700억 원)을 결의하였다.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기 이전에 출자전환결의를 하게 된 원인은 쌍용건설이 2012년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어 출자전환을 통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1차 출자전환의 발행조건은 보통주 1주당 15,000원(액면가 5,000원)이고, 2014년 6월말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8,220억 원)가 청산가치(4,310억 원)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중에 약 5,000억 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위 금액 상당의 신규지원이 필요하고, 2013년 상반기에 기존 주식의 50:1 감자 및 추가 출자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쌍용건설은 2013년 6월경 협의회와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채권 2,450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3,829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출자전환과 신규지원자금의 규모는 쌍용건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폭이 크지 않았고 유동성 부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주도로 M&A를 추진하였는데, 우선 잠재적 투자자인 M+W그룹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증자시도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M+W그룹은 실사 이후 우발채무 존재가능성, 영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인수금액을 삭감하려고 하고 양해각서(MOU)체결을 계속 지연함에 따라 매각협상이 결국 결렬되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과 우리투자증권을 공동매각주관사로 선정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M&A를 추진하였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과 실적 개선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유찰되었고, 그 후 주관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여 외부자본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M&A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쌍용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자,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2013. 12. 4. 쌍용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78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

였다. 쌍용건설은 외부 차입이나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사대금채권 등과 같은 매출채권의 회수가 유일한 자금조달수단이었는데,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로 인해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 전환 및 신규자금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은행들 사이에 협상을 추진하였지만 난항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의 자율적인 협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회합29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9. 10:00 개시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 김석준으로 하여금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워크아웃 당시에 실사를 담당하였던 예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쌍용건설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는 2014. 4. 25. 14:00로 예정되어 있다.

나. 검토

쌍용건설은 특히 해외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해외 발주처에 대한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 169곳 중 국내 현장이 146곳, 해외 현장이 23곳이고, 국내 공사 총도급액은 약 5조 56억 원, 해외 공사 총도급액은 약 3조 3,314억 원이다. 위와 같이 해외 공사현장 등 사업장에 대한 평가결과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나 회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하고 Fast Track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던 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채권단이 추천하는 CRO에게 아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① 회생절차진행 등 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 ② 법원 허가 및 법원 제출 문서의 사전 검토 및 의견제출 권한 부여, ③ 부인권 행사에 대한 전권 부여, ④ 자금관리인의 선임권한 및 채권자협의회 보고의무 부여, ⑤ 기존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및 개별 사업장 공사타절 여부에 대한 업무권한 부여, ⑥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계법인 등 자문기관 선정 및 그 비용의 채무자 회사 부담 등이다.

쌍용건설 사건은 비협약채권자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의 경우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채권단이 추천하는 CRO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Fast Track절차로 진행할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완급조절함으로써 개별 사건별로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고 있다.

3. STX그룹 사건

가. 경위

STX그룹은 조선업, 해운업 등을 주력업종으로 하여 2012년말 기준 국내외 139개 계열사를 보유한 총 자산 기준 17위 그룹(약 36조 원)이었다. 사주인 강덕수 회장이 지주회사인 STX를 통해 계열소속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서, 상장사인 STX, STX조선해양(조선업), STX팬오션(해운업), STX엔진(내연기관제조업), STX중공업(선박부품제조업) 등이 주력사로서 조선업, 해운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사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STX그룹은 2007년 이후 외부차입을 통해 계열사 지분투자 및 지원 등 확장경영을 추진하여 왔지만(예를 들어 STX대련, STX유럽 인수 등), 조선·해운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해 계열사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급감함에 따라 2012년 이후 급격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사업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STX그룹은 뒤늦게 계열사 지분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적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M&A 시장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에 STX그룹은 계열사별로 구조조정 방법을 달리 정하였다.⁴²⁾ STX,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의 경우는 기촉법을 적용하여 워크아웃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공모회사채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선박건조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 구조조정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기촉법 적용시 기존채권 뿐 아니라 대규모 신규지원자금까지도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어 신규자금지원 참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일부 채권은행에서 불참의사를 피력하는 등 문제점이 나

42)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과 KDB -외환위기 이후 15년을 중심으로-, 877면.

타나서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STX조선해양은 2013. 3. 29.경, STX, STX엔진, STX중공업은 2013. 5. 3.경 각 기촉법이 아닌 채권단자율협약 신청을 하였고,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단자율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경우 2.5년치 수주잔량이 확보되어 있는 점, 업황개전시 정상화가 가능한 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촉법이 아닌 채권단자율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경영정상화방안으로는 기존채권 상환유예, 금리인하, 출자전환, 긴급운영자금 지원, 선수금의 자금관리단 관리 등이 있다.

반면, STX팬오션의 경우는 비협약채권자인 용선채권자의 비중이 협약채권자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대부분이 외국 국적의 선사인 관계로 워크아웃절차보다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인수자금으로 용선료지급 및 기존 채무 상황에 충당함으로써 일시적인 부도상황을 회피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인수하였다가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결국 인수를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STX팬오션은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회합1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1. 22.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사는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외형을 중시해온 선대운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대대적인 선박매각을 추진하고 용선부분도 기존 187척에서 10척 수준으로 줄이는 등 매출축소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M&A를 추진하고 있다.

나. 검토

STX그룹은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한 사업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주업종인 조선업과 해운업을 기반으로 한 탓에 조선, 해운 경기에 민감하고 갑작스런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에서는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 개시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위 회사는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STX조선해양 등 회사는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로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채권단자율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부실정도가 심각한 STX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막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약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은행에도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일부 채권은행들이 기촉법에 기한 신규자금지원을 원치 않았다. 결국 STX조선해양 등 회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약에 기한 여러 가지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여 채무재조정,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운업종의 STX팬오션은 비협약채권자들(외국 용선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 뿐 아니라 기타의 워크아웃절차 모두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재조정, 사업구조조정, M&A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V. 기촉법 상시화 주장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문제의 소재

기촉법은 원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협약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기촉법은 사적, 자율적 워크아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촉법 제1조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촉법은 항상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한시법 형태로 입법이 되어 왔는바, 이는 상시적,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만 과도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초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취지가 위환위기 직후인 2001년만 하더라도 경제여건상 시간적 여유가 없고 채권금융기관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해조정을 해나가는 시장관행이 부존재하여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체제가 시장관행으로 정착될 때까지만 기촉법을 적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당장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나 법조계에서 한시법인 기촉법 제정에 대하여 큰 반대를 하지 않았었다.⁴³⁾

43)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40면.

2001년 기촉법 제정 이후 벌써 13년이 지났다. 지난 13년 동안 기촉법은 우여곡절 끝에 어느덧 네번째 기촉법(현행법)이 되었다. 현재까지도 채권금융기관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합리적인 시장관행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지난 13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성되지 않은 위와 같은 시장관행은 과연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인 채권자(금융기관)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이해조정은 원래부터 쉽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⁴⁴⁾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기촉법은 위와 같은 시장관행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시장 스스로의 기업구조조정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적, 자율적 합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법률로서 강제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문제삼을 수 있다. 즉, 워크아웃 제도의 본질상 사적, 자율적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서 강제하는 절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경도되어 법률로서 강제하는 절차를 상시법으로 만들어 원칙적인 절차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법제화되는 순간 사적, 자율적인 구조조정수단이 아닌 법제화된 새로운 파산법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채무감면, 채권회수 등 채무재조정 방안과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방안 마련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에서는 채무감면, 채권회수 등과 같은 채무재조정 방안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채권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채권자들 중에는 당장 신속한 채권회수를 바라는 채권자도 있고, 신속한 채권회수보다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상화된 채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채권자도 있다.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무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권리변경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방안 마련은 채무재조정의 측면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재건과 그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경영정상화 측면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인 채권자보다는 채무자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좀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채권자

44)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41면.

로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보다는 신속한 자산매각 등을 통한 채권회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해 기업의 재건과 채권회수의 극대화라는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채권회수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마련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면 구조조정의 주체인 채무자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권자만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촉법 상시화 주장 및 그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2. 기촉법 상시화 주장

기촉법 상시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위와 같은 구조조정방법이 존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기촉법이 부재할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시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의 필요성

(1) 채무자 기업의 입장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추가 차입 없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부실징후기업으로서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상환유예,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워크아웃절차가 없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조정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신규자금지원은 워크아웃절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옵션이 없어지게 되면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설회사의 경우 관급공사의 수주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에 있어서 워크아웃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유

리하다고 한다.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기촉법과 달리 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채무재조정을 하게 되므로 기촉법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취약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2) 상거래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의 입장

하청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채권자들의 경우 워크아웃절차 진행 중에는 채무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거래채권자들과는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만의 채권만을 재조정하므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금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상거래채권자들의 경우 채권회수에 곤란을 겪게 되고 연쇄부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워크아웃제도가 없었다면 경영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상거래채권자들의 희생이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3) 채권금융기관의 입장

금융기관 주도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금융기관이 우선 향유할 수 있으며, 기촉법 제13조에 따라 워크아웃과정에서 지원된 신규자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신규자금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부실 초기에 해당 기업과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통해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가치증대에 따른 채권회수율 제고에서 이익을 얻을 것인지, 부도 발생 후 추심절차나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추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채권자나 채무자가 워크아웃절차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워크아웃절차를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기촉법에 의하여 일부 반대채권자가 있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무재조정, 경영정상화방안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 신규자금지원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나. 기촉법 부재시의 문제점

(1)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기촉법이 폐지되면,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기업구조조정협약과 같은 형식의 협약을 체결하여 그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들로서는 협약에의 참여 여부, 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에의 참여 여부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무임승차방법⁴⁵⁾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광범위한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체제가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워크아웃절차의 유용성 저하

기촉법 폐지와 그로 인한 협약에의 참여기관의 감소 등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면 채권금융기관에서 협약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에 소극적이 될 것이고,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채무자 기업의 범위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3)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의 미정착

그동안 시장 중심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단간 협의를 통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채권은행 등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 합의 아래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위와 같은 구조조정관행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다.

(4) 출자전환 및 재산운용제한에 따른 금융지원 애로 발생

45) 개별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모두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절차에 구속되지 않은 채 권리행사에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제25조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에 기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 각종 금융관련업법상의 규제의 적용을 2년간 면제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한 액면가 이하의 주식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간의 협약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워 개별 사건별로 금융당국이나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속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 추진에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관계법령상 수탁자산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원리금 감면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다.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실무 정착

(1) 워크아웃절차 관련 통계 자료

1998년 이후 워크아웃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한 업체는 총 188개 업체에 이르고, 그 중 83개 업체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졸업하였으며, 44개 업체는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었고,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61개 업체가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도별 워크아웃절차 진행 추이〉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2.	합계
개시	24	14	2	13	5	3		4			4	44	37	9	15	13	1	188
졸업				1	18	10	8	5	7	3	2	7	6	6	7	3		83
중단					2	2	1	1				7	7	9	13	2		44
기말 현재 진행 중	24	38	40	52	37	28	19	17	10	7	9	39	63	57	52	60	61	

(2)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실무 정착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는 일부 조항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효용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여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 특히 경제 부분의 논리는 속도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법원의 회생절차는 위와 같은 신속성과 전문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보일 수 밖에 없다.

3. 비판적 검토

가. 기촉법의 위헌성 문제

(1)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및 사적자치의 원칙 위배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3차 기촉법에서 워크아웃절차 신청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기는 하였지만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 진정한 신청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워크아웃절차 진행 중에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법상 주주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촉법에서는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관리절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채권회수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마련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면 구조조정의 주체인 채무자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회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 협의회에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사경제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인지 평가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종전에는 합리적 시기에 실행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미흡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었는데, 위 사항에 관하여는 제3차 기촉법에서 법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을 하였다.⁴⁶⁾

(2) 평등권 침해

기촉법의 적용대상은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되어

46) 종전의 기촉법에서는 경영정상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3차 기촉법에서부터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도록 변경하여 신속하게 반대채권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2항).

있는데,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부당하게 차별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기촉법에 의하면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만 위 법률에 기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5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워크아웃절차에서는 모두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촉법이 국내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외국금융기관을 배제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촉법에서는 채무조정대상 해외채권의 범위를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보유채권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국내기업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 여신이나 외국금융기관의 해외 본·지점 명의로 대출된 채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채권금융기관들의 출혈로 외국금융기관이나 사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아주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3)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및 사법적 구제수단의 미비

다수결에 의한 강제성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절차 진행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자의 1인에 불과한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주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의 진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이고, 약정당사자의 일방인 주채권은행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회생절차에서 중립적인 기관인 법원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절차를 주재하고 관리하는 점과 대비된다.

한편, 협의회 의결로 채권재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 기촉법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촉법에서는 협의회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등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위 협의회 의결에 대하여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사법적 구제수단이 일부 개선되

기는 하였지만, 협의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불복절차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점과는 대비된다.

(4) 사법질서 위배

워크아웃 실무에서 기촉법에 의해서 주채권은행이나 협의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벌어지는 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⁴⁷⁾

“워크아웃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전권을 행사한 결과 전문분야와는 관계가 없이 관리인이 금융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매각함에 있어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근원적으로 보면, 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모두 기업이나 국민에게 떠넘겼을 뿐 아니라 어떠한 책임도 진적이 없다. 절차면에서도 금융기관들은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회생실무준칙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법기관적 지위를 누려왔다.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청산절차에 불과할 뿐 기업 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종래 워크아웃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는 비난이 가능한 이유이다.”

나. 관치금융의 우려

기촉법에 의한 금융감독당국의 개입은 제6조 제1항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요청권과 제26조에 있는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개입 외에도 금융기관 간 기업구조조정 관련 협약의 제·개정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산업분야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⁴⁸⁾ 워크아웃절차에서 외형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주도로 절차가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의사와 의중에 따라 절차가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의견상으로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절차로 보이지만 정부가 지분을 과반수 넘게 가지고 있는 은행도 있고, 주요 은행장의 인사에 정부가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관

47) 노영보, “도산은 사법절차다”, 2012. 10. 4.자 법률신문 서초포럼 칼럼

48) 정순섭, “기업구조조정의 법률관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구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심포지엄’ 자료집, 38면.

치금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⁴⁹⁾ 이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이나 금융시장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후에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정책적 판단에 대하여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정책적 판단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민주화되었고, 금융기법이 바뀌고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화·세계화됨에 따라 관치금융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직도 관치금융의 장점을 호소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법치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축법을 통해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관여하여 사기업 퇴출에 관여하는 묵은 전통을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기축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업무의 영역을 넘어서 규제대상기관인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나쁜 전통이 계속된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큰 오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⁵⁰⁾

또한 부실징후기업의 선정과정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기업의 선정과정에서 각 주채권은행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금융감독당국이 각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보고받은 후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다. 부실징후기업의 판정절차 관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도 미비하여 부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든지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부실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입게된 유·무형의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

다. 절차의 밀행성, 불투명성

자율협약상의 기밀유지의무를 들어 구조조정대상 기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절차가 밀행적으로 진행되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법원의 회생절차는 법원의 공정한 감독하에 개시결정, 인가결정, 회생계획 등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선례로서의

49)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30면.

50)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4권 4호(49호, 2006. 2.), 151~152면.

기능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선례들이 다수 축적되어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워크아웃절차의 진행내역은 채권단과 당해 기업 간에 밀행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상거래채권자나 회사 직원 등 다른 이해관계자 조차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자료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워크아웃절차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워크아웃절차의 장점으로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절차 운용의 유연성, 신속성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해진 원칙이나 규정이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¹⁾ 당해 기업에 맞는 CASE BY CASE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 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⁵²⁾

라. 워크아웃의 기본이념에 위반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또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에서도 워크아웃의 장점을 회생절차에 반영하여 신속한 개시결정과 절차진행 및 조기종결을 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워크아웃의 공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양제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양제도가 서로 보완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⁵³⁾ 워크아웃의 핵심은 절차참여자들의 자율성 보장이고 사적 구조조정절차라는 점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사항을 망각하여 자율성과 사적 자치보장의 원칙보다는 효율적인 사항만을 추구하려한다면,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기촉법이 상시 법제화되는 순간 이에 기한 워크아웃제도는 사적 구조조정절차 내지 자율적인 채무조정이라는 워크아웃의 본질요소를 상실한,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채권자 주도의 법정구조조정제도가 만들

51) 실례로서, 금융기관에서는 회생절차에서 DIP제도를 수용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비판을 하고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이라는 명확한 선임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워크아웃절차에서는 기존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할지, 경영권을 퇴진시킬지 관련하여 공개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자본감소 및 출자전환으로 경영권이 상실되는지 여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정에 좌우되어 경영권 보장 여부가 안정적이지 아니하다.

52)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26면.

53)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28~29면.

어지는 것이다.

Ⅵ. 회생절차 개선방안

기촉법이 상시화되는 것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기촉법에 기한 워크아웃절차의 장점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 ② 상거래채권자들과는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만의 채권만을 재조정하므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③ 신규자금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워크아웃의 장점들을 수용 내지 흡수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1. 절차 진행의 신속성 도모

가.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 - 신속한 절차 진행

워크아웃절차의 장점으로 언급된 사항 중에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은 회생절차에서도 이미 구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1년 4월 이후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는 채권자들과의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상의 사전계획안제도를 활용하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최대한 빨리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LIG건설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는 2011. 4. 1.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6개월 만인 2011. 9. 30.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그 밖에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의 도입으로 채권자들의 협조만 있다면, 개시일로부터 3~4개월만에 인가를 받거나 4~6개월만에 종결하는 사건들도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않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사전계획안 제도의 활성화 - 사전 절차 존중 및 절차 간소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법원의 회생계획 제출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통합도산법 제220조). 회생계획 제출명령이 내려지면, 관리인을 비롯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221조). 그런데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예외적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통합도산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 제도라고 한다.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223조 제5항). 또한,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규정(통합도산법 제223조 제4항)⁵⁴⁾을 둠으로써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전계획안 제도는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에 중점을 두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작성하여 대상 기업과 그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 제도 역시 채권자들의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전 기촉법에서는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제3차 기촉법에서는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종전에는 기촉법상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회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위 경영정상화계획을 사전계획안처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은 향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 한 사전계획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진행된 워크아웃절차를 존중하고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채권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워크아웃절차에서의 신규자금지원 등의 사유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변제순위에 차등이 생긴

54) 사전계획안이 제출되고 그 제출자 또는 동의자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하고 그 연장결정은 1월을 넘지 못한다.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와 같은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193조 제3항).

위와 같이 워크아웃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사전계획안 제도를 잘 활용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대우자동차판매 사건이다. 위 사건은 사업분할 및 투자유치가 포함된 기존의 워크아웃플랜(경영정상화계획)을 반영하여 Fast Track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에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조사위원 선임은 임의적 사항이므로(통합도산법 제87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자 사이에 이미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워크아웃절차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 절차를 존중하고 절차의 신속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실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대우자동차판매 사건에서도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미 재산 및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조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바 있다.

2.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 활성화

가.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규정의 비교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들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행사유예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유예하고 협의회 의결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게 되므로, 그 반대효력으로서 나머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보니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주로 상거래채권자들과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채무변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131조).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하여도 회생채권의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제132조 제1항)와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132조 제2항)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나.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 파산법에서는 우리 통합도산법 제131조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회생채권의 변제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는 자동중지 규정[§ 362(a)(6)], 채권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 507,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편파적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한 § 549(a)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우선권없는 회생채권을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예외적으로 ‘Necessity of payment rule’에 따라 채무자 회생에 중요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회생채권의 변제를 허용하고 있다. ‘Necessity of payment rule’은 철도회사 회생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의 조기변제를 허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⁵⁵⁾에서 연유하였다.

그러던 중 2004년 Kmart 사건⁵⁶⁾에서는 위와 같은 변제를 신중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004년 Kmart는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회생에 중요한 납품업체 2,330곳에 대하여 회생채권 3억 달러의 변제허가를 신청하였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43,000명의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통지나 이의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7th Cir)은 종래 파산법원이 연방파산법 § 105에 기하여 회생에 필요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변제를 허가해 온 것을 부정하였고, 연방파산법 § 363(b)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비통상적인 행위로 인한 채무변제로서 유효할 수 있다고 하면서 Kmart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

55) *Miltenberger v. Logansport Railway*, 106 U.S. 286 (1882)

56) *In re Kmart Corp*, 359 F.3d 866(7th Cir. 2004)

였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회생절차개시 전 45일 내에 공급한 물건을 환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546(c)], 회생절차개시 전 20일 내에 물품을 공급한 자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503(b)(9)].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를 마련하였다.

(2) 일본

일본 회사갱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갱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변제수령 기타 갱생채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갱생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자가 갱생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인가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회사갱생법 제47조 제2항), 소액갱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갱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거나 갱생회사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인가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회사갱생법 제47조 제5항).

일본 회사갱생법은 우리 통합도산법 규정과 거의 비슷하나, 그 범위는 소액채권의 변제에 국한되어 우리 통합도산법 규정(제132조 제2항)보다 인정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다. 검토

계속적 거래를 하는 상거래채권자는 채무자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채무자의 회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달리 취급하여 보호해 줄 필요성이 크다. 특히, 기촉법에서는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지가 적용되지 않아서 채무자 기업의 영업에 타격을 주지 않고 연쇄 부도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장점을 회생절차에서도 최대한 수용하여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회생에 필요한 거래처를 채무자가 자의로 선정하면 상거래채권자 상호간에 불평등,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거래채권자에 대하여는 무조건 조기변제 내지 100% 변제를 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들에게만 회생을 강요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회생채권 변제금지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통합도산법 제132조에서 정하는 예외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DIP 파이낸싱의 활성화

가. 회생절차에서 DIP 파이낸싱이 안되는 이유

워크아웃절차에서는 기촉법에 기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활성화되어 있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신규자금지원이 워크아웃절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규자금지원의 규모를 정하고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구분 없이 채권액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전과 달리 상업주의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업무를 대하고 있어 주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신규 리스크 부담이 불가피한 신규자금지원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간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워크아웃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여는 거의 없었다. 워크아웃절차에서 신규자금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채권금융기관이 그 절차를 주도할 수 있고 이를 상환받기 위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⁵⁷⁾ 자금회수가 의문시된다면 그 누구도 회생신청을 한 기업에 신규자금을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DIP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신규자금대여자에게 자금회수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기존 담보채권자로부터 DIP 파이낸싱을 할 경우 담보채권 일부를 대환하는 roll-up도 필요하다.

기촉법에서는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기촉법 제11조), 기업개선약정 체결시에도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신규자금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도 2009. 10. 21. 개정으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79조 제1항 제5

57) 정준영, “한국 기업회생절차에서의 DIP financing”,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2011. 11.), 161면.

호, 제180조 제7항).⁵⁸⁾ 위 규정 내용을 보면, 기촉법에 비하여 그다지 불리하지 아니함에도 회생절차에서는 아직 DIP 파이낸싱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워크아웃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회수 관련 상황을 위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나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 의한 제약이 있어서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대출에 소극적인 점, 둘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에는 신규자금대출을 실행할 정도의 회생 가능성 및 자금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거의 없는 점, 셋째 금융기관의 경직된 대출기준 및 위험회피관행, 넷째 금융기관의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비협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회생절차에서의 DIP 파이낸싱 사례

아래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 DIP 파이낸싱이 있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1), (2)번 사례는 회생절차 중 DIP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고, (3)~(5)번 사례는 회생절차 종결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로서 일명 exit financing이라고 할 수 있다.

(1) 쌍용자동차 사건

2009. 1. 9. 회생신청을 한 쌍용자동차는 약 2,500억 원의 신규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회생절차 중 본사공장 및 기타 부동산을 공익담보권으로 제공하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2009. 8. 18. 인력구조조정비용 1,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는 2010년에 회사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신차 출시관련 비용 1,000억 원을 조달하였다.⁵⁹⁾

쌍용자동차는 2009. 12. 17. 인가 이후 2010. 11. 23. 인도의 마인드라엔 마인드라 Ltd.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전제로 2011. 1. 28.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였으며, 결국 2011. 3.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동양건설산업 사건

58) 하지만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신설되지 못하였다.

59) 최효중,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쌍용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산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2011. 5. 21.)(미공간), 13면.

동양건설산업은 2011. 7.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1년 11월경 금전채권신탁(분양대금채권)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SC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신규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DIP 파이낸싱에 성공하였다.

(3) 대우로지스틱스 사건

대우로지스틱스는 2010. 10.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정책금융공사 등 투자자들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여 채무자 회사에 1,200억 원을 투자하여 그 중 600억 원으로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600억 원으로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이후 대우로지스틱스는 위와 같이 조달된 자금 중 600억 원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의 조기변제에 450억 원을 영업용 선박구입에, 150억 원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다음 2011. 6.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사건은 투자펀드에 의한 DIP Financing이라고 할 수 있다.

(4) 새한비료 사건

새한비료는 비료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에 관한 회생담보권자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직후 바로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를 요구받게 됨에 따라 인가 직후 위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기존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14. 1. 22. 위 회생계획이 인가되자마자 2014. 2. 11. 영업용 부동산인 위 공장을 담보로 무림캐피탈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그 공장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전액 변제하였다.

(5) 다우닝산업 사건

다우닝산업은 2009. 1.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09. 9.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2009~2012년까지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등을 전액 변제완료하였다. 다우닝산업은 2013. 5. 29.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환형식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조기종결 허가신청을 하였고, 결국 종결 이후 대환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3. 6. 1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DIP 파이낸싱의 활성화 대책

한국의 경우 DIP 파이낸싱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신규자금대여자의 절차주도현상은 없고, 오히려 회생기업에 대한 신용규제로 인해 운영자금 조달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산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운영자금의 조달이 회생절차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기업에서의 운영자금 조달은 미국의 DIP 파이낸싱기법과 한국의 워크아웃에서의 신규자금지원 실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회생절차에의 DIP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내용에 대하여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재무상황, 회생가능성, 기업가치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자금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규자금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회생담보권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 방식 등을 통해 신규자금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규자금대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참여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 초기에서부터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기업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⁰⁾ 회생절차에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채무재조정 및 자구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작성에도 관여하도록 하여 신규자금공여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회사의 조기종결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exit financing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금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워크아웃에 준하여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실무를 운영함으로써 신규자

60) 정준영, “한국 기업회생절차에서의 DIP financing”,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2011. 11.), 165면.

금회수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자금대여채권자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도 다른 채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조치도 필요하다

4. 채권자들의 절차 참여권 확대

가. 절차 참여권 확대의 필요성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생절차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는 워크아웃 절차와 달리 채권자들의 절차참여기회나 권한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회생절차에서의 실무는 채권자들의 역할이 미미한 편이었다. 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개진,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의 참여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워크아웃절차는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구조조정업무가 추진되고 회생절차는 지나치게 채무자 주도로 구조조정업무가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회수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마련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면 구조조정의 주체인 채무자 기업이 일단 주도권을 가지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마련에 있어 충분한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방안

(1) CRO 권한 부여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CRO를 위촉함으로써 CRO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자금 관리, 주요 허가사항 검토, 재무상황 보고 및 구조조정업무 감독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원활한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쌍용건설 사건을 들 수 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단이 추천하는 CRO에게 아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① 회생절차진행 등 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 ② 법원 허가 및 법원 제출 문서의 사전 검토 및 의견제출 권한 부여, ③ 부인권 행사에 대한 전권 부여, ④ 자금관리인의 선임권한 및 채권자협의회 보고의무 부여, ⑤ 기존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및 개별 사업장 공사타절 여부에 대한 업무권한 부여, ⑥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계법인 등 자문기관 선정 및 그 비용의 채무자 회사 부담 등이다.

(2)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의 참여

채권자들로 하여금 조사결과 보고절차 및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들의 의견개진 및 반영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전 보고시에 채권자들도 참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관련해서도 만약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 한 사전계획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채권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금융기관의 인식변화를 위한 개선노력(과거법원에 대한 불신 해소)

일부 금융기관들과 금융당국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정리실무에 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아직도 채무재조정이나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법원 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사정리사건 처리에서 다소 경직된 실무운영이 없지 않았고 금융이나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법원 회생절차는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고, 회생절차는 워크아웃절차 못지 않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의 공정한 감독하에 개시결정, 인가결정, 회생계획 등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선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선례들이 다수 축적되어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등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되었다.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한 인식변화 개선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의 장점

으로 제시되는 신규자금지원 역시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및 법원절차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상반기에 채권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채권금융기관과의 소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워크아웃절차 못지 않게 채권자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채무재조정이나 자구계획마련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위와 같은 인식변화 개선노력을 병행하여야 신규자금지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 노영보, “도산은 사법절차다”, 2012. 10. 4. 자 법률신문 서초포럼 칼럼
-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4권 4호(49호, 2006. 2.)
- 오수근, “도산법의 개정방향”, BFL 제34호(2009. 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지홍·문병순, “기업구조조정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 LG Business Insight(2013. 11. 13.)
- 임치용, “한국의 워크아웃제도 - 회생절차와의 비교”,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1.)
- 정규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무상 주요 쟁점”, BFL 제34호(2009. 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정순섭, “기업구조조정의 법률관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구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심포지엄’ 자료집
-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법원 산하 도산법커뮤니티 원외세미나 발표문(미공간, 2011. 10.)
- 정준영, “한국 기업회생절차에서의 DIP financing”,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2011. 11.)
- 조규홍,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실무”, BFL 제53호(2012.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조규홍, “Out of court workout and pre-package”, 도산법연구 제4권 제2호(2014)
- 최효중,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쌍용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산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2011. 5. 21.)(미공간)
-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과 KDB -외환위기 이후 15년을 중심으로-